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음 10월 18일) 제29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사회적경제, 새롭게 꽃피우다

‘제1회 전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부대행사 다채... 유공자·협동조합 대상 표창 수여
사회적경제기업 57개사 참여... 도민 인식개선 기여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고 민·관이 협력해 만든 ‘제1회 전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많은 도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9일 제1회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는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 김임준 군산시장, 김기태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박람회 개최를 축하해 줬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개막퍼포먼스와 박람회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기업전시관 라

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 유공자 포상은 김은정 국장(사회적기업 좋은 이웃), 김성숙 대표(마을기업 백련농장 영농조합), 송미경 대표(자활기업 드림사회서비스센터)와 협동조합 대상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그 공로를 인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개막퍼포먼스에는 박람회 참석인사들이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며, ‘사회적경제, 새롭게 꽃 피우다’를 주제로 하는 터치등 퍼포먼스가 진

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7개사(사회적기업 21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15개, 자활기업 10개)가 참여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컨퍼런스,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아울러 도와 군산시의 사회적경제 정책홍보관과 시·군 중간지원조직 홍보관, 군산지역 대학 및 청년기업 드림사회서비스센터와 협동조합 대상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그 공로를 인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방안, 전북 사회적경제 지원요청 및 지원현황과 필요성 등 도내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도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현실, 도내 청년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멘토멘티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 밖에도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클래식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과 사회적경제 관련 영화 상영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도민들에게 생생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특히 박람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관람객들에게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식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박람회 현장 생중계와 참여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가 동시에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따뜻한 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전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코로나로 지친 도민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11월 8일 기준) 도민 대상 코로나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1만6,163건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84% 증가한 수치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우울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심리상담, 정보제공,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청년·여성·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 도민을 대상으로 TV 및 라디오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증진을 도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수면·안면·반려동물 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기(키오스크) 및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응인력 소진예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또한, 청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 정신건강 검진을 제공하는 무료검진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진행

해 추진한다. 아울러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성에게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관을 연계해 심리검사 및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등에게는 정서적인 위안과 동질감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한용 심리지원키트를 보급한다. 전북도는 코로나 우울 대응 도민 심리지원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실질적 방역효과 위해 정밀한 방역대책 필요”

송 지사, 일상회복지원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지난 19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자치안전분과위원회’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 회의실(12층)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안전 분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처우개선 계획,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 자율성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송 지사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방역수칙도 형식적 지도감독이 아닌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인원제한 준수 여부만을 점검하지 말고, 인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내용적인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하진 지사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의 만남 접촉보다는 새로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비밀한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유행기간은 길어지고 있어, 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 보건소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시적 인력 지원보다는 보건소 상시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거점소독시설 21개소로 확대 · 도내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도는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과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 중이다. 또한, 도는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마자,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황 조정할 바 있다. 이에, 현재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